
'24년 예산안 20대 핵심과제

2023. 8.

목 차

[약자복지 강화]

1. 진정한 약자복지 이행을 위한 기초생보 강화	1
2. 장애인은 국가가 책임지고 돌봄	4
3. 노인 일자리 100만명 돌파	6
4. 소상공인 힘내세요, 경영응원 3종 패키지	7
5.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취업 지원을 강화	8
6. 생활 체감형 청년 지원	9
6-1. 대중교통 요금 할인(K-Pass 도입)	10
6-2. 청년의 Fun Work, 산리단길	11
6-3.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할인	12
6-4. 농업의 미래를 열어갈 청년농 육성	13

[미래준비 투자]

7.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은 나라	14
7-1. 신생아 출산가구 주거 안정 3종세트	15
7-2. 육아휴직을 1년 6개월로 확대	18
7-3. 영아기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	19
7-4. 언제 어디서나 보육·돌봄을 이용 가능하도록 지원	20
7-5. 지역아동센터에서 보다 세심한 돌봄 지원	21
8-1. 태어난 직후 모든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준비 지원 ...	22
8-2. 소아·응급환자 의료공백 해소	23
9. 글로벌 생태계를 주도할 꿈의 Flagship 프로젝트 ..	24
10. 민간투자 614조원, K-첨단클러스터가 앞장	25
11. 탄탄한 자원 공급망, 튼튼한 에너지 안보	26
12. 노동시장 이중구조, 상생협력으로 극복	27

목 차

[일자리 창출]

13. 첨단서비스 분야의 ABCD	28
13-1. AI: 산업 초격차와 국민 체감의 인공지능 시대	29
13-2. Bio: 신산업 창출 및 국민 삶의 질 개선에 투자	30
13-3. Cyber 보안: 정보는 공유하고, 보안은 강화	31
13-4. Digital 플랫폼 정부: 국민수요 충족 디지털서비스 ..	32
14. 세계로 뻗어나가는 K-콘텐츠	33
15.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34
16. 농업 직불예산 3조원 달성	38

[국가 본질기능 강화]

17. 수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40
18. 국민 마음을 살피고 보듬겠습니다	41
19. 초급간부 처우 획기적 개선으로 우수자원 확보	42
20. 국격에 걸맞은 ODA 확대로 국익 창출	43

1. 진정한 약자복지 이행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 그간 생계급여의 점진적 인상*,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노력에도 보장수준 강화 요구 지속

* 연도별 생계급여액 및 인상액(4인가구, 만원)

구분	'18	'19	'20	'21	'22	'23
생계급여액	135.6	138.4	142.5	146.3	153.6	162.0
전년대비 (증가율)	+1.6만원 (1.16%)	+2.8만원 (2.09%)	+4.1만원 (2.94%)	+3.8만원 (2.68%)	+7.3만원 (5.02%)	+8.4만원 (5.47%)

** 부양의무자(부모, 자식 등)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 제외(~'22년)

2. '24년 지원방향 : 생계급여 인상액 역대 최대 13.2% 인상

- (생계급여) 급여액을 지난정부 5년간 인상분(19.6만원) 보다 큰, 역대 최고 수준인 +21.3만원 인상(4인 가구)
 - '15년 제도설계 이후 최초로 선정기준을 상향(중위 30→32%) 하여 3.9만 가구 신규 지원
- (의료급여)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3.5만명 신규 지원, 신규 편입된 수급자는 연간 34만원의 의료비용 절감 혜택

'23년	'24년	의미·효과
① [생계] 생계급여액 역대 최대폭, 13.2% 인상		
선정기준 기준 중위 30% 최대급여액 162.0만원/월	기준 중위 32% 183.4만원/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곤층 3.9만 가구 신규 지원 ○ 4인가구 기준 최대 월 +21.3만원 생계비 지원 확대 * 지난정부 5년간 인상액 +19.6만원
② [의료]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일정소득 이상의 부모·자녀가 있는 경우 의료급여 제외	중증장애인은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5만명 신규 지원(시행 첫 해 2.2만명) ○ 연간 34만원의 의료비용* 절감 (평균 연간 의료비 58 → 24만원 감소) * 건강보험료 및 본인부담금

참고 1

생계급여 제도 확대(중위 30→32%) 효과

① 최대 생계급여액(4인 가구) : 13.2% 증가(162.0만원→ 183.4만원/월, +21.3만원)

	[기준중위소득]		[선정기준]		[최대생계급여액]	[예산]
'23년	540만원	×	30%	=	162.0만원	6.0조 원
'24년	573만원	×	32%	=	183.4만원	7.5조 원
증가율	+6.09%*		+2%p		+13.2%	

* ('18) 1.16%, ('19) 2.09%, ('20) 2.94%, ('21) 2.68%, ('22) 5.02%, ('23) 5.47%

② 제도 확대 효과

- ① 기존 수급가구는 생계급여액 인상(최대 21.3만원) 혜택
- ② 선정기준 상향(30→32%)으로 3.9만 가구 신규 편입

③ 가구별 인상 효과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3년	급여액(만원)	62.3	103.7	133.0	162.0	189.9	216.8
	급여액(만원)	71.3	117.8	150.9	183.4	214.3	243.8
'24년	증가율(%)	14.4%	13.7%	13.4%	13.2%	12.8%	12.4%
	증가액(만원)	9.0만원	14.2만원	17.8만원	21.3만원	24.3만원	26.9만원

참고 2

'24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지원내용

구 분	지원 내용	'23년	'24년
생계 급여	○ 최대 생계급여액(4인 가구)	162만원/월 (지난정부 5년간 +19.6만원)	183.4만원/월 (+21.3만원)
	○ 선정기준 상향(기준중위소득 대비) * '15년 제도설계 이후 첫 상향	30%	32% (3.9만 가구 신규 편입)
	○ 생업용 자동차 재산의 월소득환산율	4.17%	소득산정 제외 (6.5만 가구 혜택)
	○ 다자녀·다인가구, 도서벽지 자동차 재산의 월소득환산율	100%	4.17% (0.5만 가구 혜택)
	○ 근로소득공제 청년특례 적용 연령 * (일반공제) 소득산정시 근로소득의 30% 공제 (청년특례) 근로소득에서 40만원 공제 후 30% 공제	24세 이하	29세 이하 (1.2만 가구 혜택)
의료 급여	○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연간 3.5만명 신규 편입) * 1년차 2.2만명 편입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개선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2.28억원(서울)	3.64억원(서울) (연간 1.4만명 신규 편입) * 1년차 0.9만명 편입
주거 급여	○ 선정기준 상향(기준중위소득 대비)	47%	48% (2만 가구 신규편입)
	○ 최대 주거급여액(서울, 4인가구)	51.0만원/월	52.7만원/월 (+1.7만원)
교육 급여	○ 교육급여액(연간 지원액)	초등 41.5만원 중등 58.9만원 고등 65.4만원	46.1(+4.6만원) 65.4(+6.5만원) 72.7(+7.3만원)

2. 장애인은 국가가 책임지고 돌봅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 그간 활동지원·주간활동 등 돌봄 서비스는 확대*되었으나,

* 활동지원 ('18 7.1만명 → '23 11.5만명), 주간활동('19 0.3만명^{신규} → '23 1.0만명)

○ 도전적 행동 등 극심한 장애가 있는 발달장애인은 기존 돌봄 연계가 어려워 가족의 돌봄 부담 가중

* 주보호자 하루 평균 돌봄시간 : (최중증발달) 10.4시간, (일반발달) 4.1시간

2. '24년 지원방향 : 장애인 돌봄은 사각지대 없이 더 촘촘히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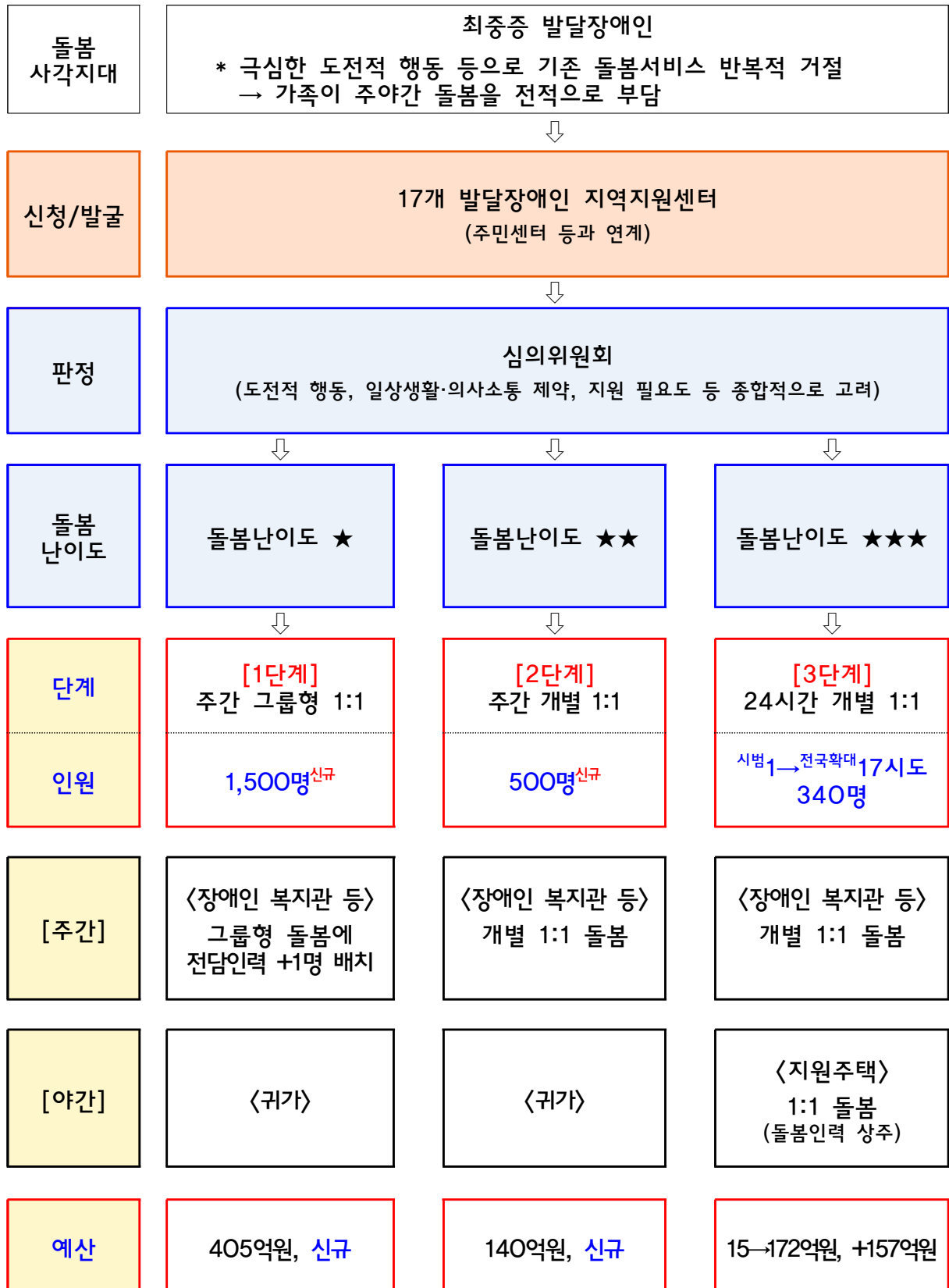
① 도전적 행동 발달장애인의 난이도 단계별(3단계) 1:1 돌봄 체계 신규 구축 ⇒ 장애인 가족의 극심한 돌봄 부담을 해소

② 장애인, 최중증 장애인, 장애아동, 발달장애인의 활동지원, 발달재활 등 돌봄을 크게 확대

구분	돌봄서비스	'23년	'24년
① 장애인 기존 돌봄 확대 2.32 → 2.65조원(+0.33조원)			
장애인	활동지원 * 일상생활 활동지원사 월 60~480시간 지원	지원인원 11.5만명	12.4만명
최중증 장애인	가산급여 * 고난이도 활동지원에 대한 활동지원사 인센티브	지원인원 0.6만명	1.0만명
장애 아동	중증장애아돌봄 * 장애아 돌봄 및 가족휴식 제공	돌봄시간 月 80시간	月 90시간
	발달재활 * 인지기능향상·행동발달 지원	지원인원 7.9만명	8.6만명
발달 장애인	주간활동 * 주간 1:3 그룹형 돌봄	지원인원 1.0만명	1.1만명
②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돌봄 체계 구축 15→717억원(+702억원)			
도전적 행동 발달장애인	1단계 주간 그룹형 1:1	—	지원인원 1,500명 ^{신규}
	2단계 주간 개별 1:1	—	지원인원 500명 ^{신규}
	3단계 24시간 개별 1:1	지자체 1개, 지원인원 20명	17개, 340명

참 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난이도 단계별 1:1 돌봄 체계(안)



※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기관 및 제공 형태는 추후 변동 가능

3. 노인 일자리 100만명 돌파

1. 현황 및 문제점

- '24년 노인 인구 천만시대* 진입하나 기초수급자 중 노인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 → 저소득 노인 지원 강화 필요

* 노인인구(만명) : ('22) 901.8 → ('23) 950.0 → **(24) 1,000.8**

** 기초수급자 중 노인가구 비중(%) : ('19) 37.4 ('20) 38.1 ('21) 43.2 ('22) 45.3

- '일하는 복지'로서의 노인일자리 사업 규모는 희망자(노인인구의 10.3% 수준)에 비해 여전히 부족

* '22년 노인인구(902만명) 대비 **노인일자리 희망자(93만명) 비율 10.3%**
(노인일자리 수 84.5만명 + 대기자 8.5만명 → 희망자 93만명)

2. '24년 지원방향 : 노인 일자리수와 수당 대폭 확대(1.5→2.0조원)

- 노인일자리 **역대 최고 수준 증가(88.3 → 103.0만명, +14.7만명)**
- '18년 이후 **6년** 만에 일자리 수당 인상(**2~4만원**)

구분	'23년	'24년	의미·효과
① 노인 일자리 +14.7만명 확대			
일자리	88.3만명 (노인대비 9.3%)	103.0만명 (노인대비 10.3%)	○ '24 노인인구 천만명의 10.3% 수준 → 노인 10명 중 1명 지원 가능
② 노인 일자리 수당 2~4만원 인상			
공익형	月27만원 (60.8만명)	月29만원 (65.4만명)	○ 노인 일자리 수당 2~4만원 인상 (+7% 수준) ○ 양질의 민간·사서형 위주 확대 * 민간사서형 비중 31.1% → 36.5% < 노인일자리 예시 > ■ (공익형) 老老케어, 교통도우미 등 ■ (사서형) 보육교사보조, 공공행정 업무지원 등 ■ (민간형) 실버카페, 지하철 택배 등
사회서비스형	月59.4만원 (8.5만명)	月63.4만원 (15.1만명)	
민간형	(19.0만명)	(22.5만명)	

4. 소상공인 힘내세요, 경영지원 3종 패키지

1.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고금리 下 금융리스크, 전기요금 상승('22~'23년 30%↑) 등
영업 불확실성 증대로 다중채무자 등 취약 소상공인 증가*

* 자영업자 중 다중채무자 수 : ('21.1/4) 137 → ('22.1/4) 168 → ('23.1/4) 178만명

2. '24년 지원방향

◆ ①에너지비용 ②금융비용 ③고용보험료 부담경감 3종 패키지 신설(0.9조원)
⇒ 소상공인 12만명에게 인당 최대 △500만원 절감 효과

① (에너지비용) 고효율 냉난방설비 보급 확대 (+1,100억원)

- 고효율 에어컨, 개방형 냉장고 문닫기 지원 등 2배 이상 확대
('23년 2.9만대 → '24년 6.4만대)

② (금융비용) 低利 정책자금 대출 확대 (+0.8조원)

- 취약차주 1만명 '高利 대출' → '低利 정책자금*' 대한 신설(0.5조원)
* (지원한도) 인당 5,000만원, (적용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평균금리 4%
- 경영안정, 재해복구를 위한 정책자금 0.3조원 추가 공급(0.3조원)

③ (보험료)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강화 (+100억원)

- '24년 한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을 2.5→4.0만명으로 확대
+ 보험료 지원비율 최대 50→80%까지 상향*
- * ('23년) 20~50%(月 1.3~2.3만원)→ ('24년) 50~80%(月 3.2~3.8만원)

< 경영지원 3종 패키지 효과 >

	지원내용	수혜인원	인당 절감효과	지원규모
①에너지 비용	고효율 냉방기 4.5만대 냉장고 문닫기 1.5만대 수열히트펌프 0.4만대	6.4만명	△10만원	+1,100억
②금융비용	대환대출(11%→4% 수준)	1만명	△390만원	+5,000억
	경영안정/재해복구자금	1만명	△66만원	+3,000억
③보험료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	4만명	△40만원	+100억
합 계		12.4만명	△506만원	+9,200억

5.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취업 지원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 다문화가족은 일반가구 대비 소득수준*이 낮고, 다문화 자녀의 학습·취업 역량도 일반 가구와 상당한 격차

* (월평균 가구소득) 일반국민 대비 74% 수준('21년 기준)

**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전체 국민 71.5%, 다문화가족 자녀 40.5%('21년 기준)

2. '24년 지원 방향: 「초기 정착 지원* → 사회적 격차 축소」 중심 전환

* 한국어 교육, 통번역 서비스, 아동 언어발달지원 등

- (자녀교육) 취학 전후 아동부터 고등학생까지 기초학력 개선을 위해 교육활동비*를 신설하고 대학생 멘토링 2배 확대

* 저소득가구(중위 50~100%) 자녀 대상으로 상담 등 사례관리를 통해 지원
- (초등) 年40만원 (중등) 年50만원 (고등) 年60만원

- (취업지원) 자녀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이주부모의 근로 기회 확대를 위해 다문화가족 특화 직업훈련·취업지원 신설*

* 자녀 직업훈련(200명, 폴리텍), 이주부모 취업지원(1500명, 새일센터)

구 분		지원 내용	'23년 (884억원)	'24년 (1,225억원)
교육	교육활동비	○ 저소득(중위 50~100%) 자녀 대상 상담 등 사례관리를 통해 지원	-	60,000명 (+168억원)
	기초학습지원	○ 취학전·초등자녀 기초학습 지원 * 취학 전후 → 초등 고학년까지 확대	3,600명	7,400명 (+43억원)
	대학생 멘토링	○ 전국 대학생의 초·중고 자녀학습 및 학교생활 적응 멘토링	4,000명	8,000명 (+89억원)
취업	다문화 자녀 직업훈련	○ 기술, 한국어 등 다문화 자녀 특화 직업훈련(폴리텍, 시범사업)	-	200명 (+22억원)
	이주부모 취업지원	○ 새일센터(100개소)를 활용해 이민자 적합 직업훈련 후 취업연계	-	1,500명 (+30억원)

6. 생활 체감형 청년 지원

① (K-Pass) 「K-Pass」 도입(177만명, +516억원)

⇒ 활용 불편한 알뜰교통카드 → 교통비 부담완화+대중교통이용 활성화 K-Pass

	알뜰교통카드(~'24.6월)		K-Pass('24.7월~)
조건	· 보행·자전거 이동거리 비례 (최대 마일리지 지급 800m/회)		· 대중교통 이용횟수 비례 (21회 이상 이용시, 교통비의 20~53% 지원)
한도	· 최대 60회/월	⇒	· 최대 60회/월
최대지원	· 일반 18, 청년 25, 저소득층 50만원/년		· 일반 22, 청년 32, 저소득층 58만원/년
규모('24)	· 130만명, 336억원		· 177만명, 516억원

② (산리단길 프로젝트) 노후산단 청년친화형 환경으로 탈바꿈(+1,152억원)

⇒ 일률적 현금지원 → 산단 근무·정주여건 개선으로 초점 전환

	'23년		'24년
펀드	· 오피스텔·편의시설 민간투자 05조원 (정부투자 958억원)		· 민간투자 1조원 (정부투자 1,868억원)
편의시설	· 복합문화센터 70개소(누적) 아름다운거리 32개소(누적)	⇒	· 청년문화센터 100개소(누적) 아름다운거리 60개소(누적)
공장환경	· -		· 노후공장 리뉴얼사업 ^{신규} 150개사

③ (자격증)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경감(56만명, +242억원)

⇒ 청년 56만명, 1인당 2.1~30만원(평균 4.3만원) 감면 효과

	'23년		'24년
대상	· -	⇒	· 만 34세 이하 청년 493개 기술자격시험
방식	· -		· 응시비용 50% 감면(年 최대 3회)

④ (청년농 육성) 청년농 소득기반+정주여건 맞춤형 지원 확대(+4,582억원)

⇒ 농지·시설지원, 생활인프라 부족 → 청년농 '진입-정착-성장' 지원 확대

	'23년		'24년
농지	· 농지지원 1,875ha		· 농지지원 3,500ha(2배 확대)
창업	· -	⇒	·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신규} 2개소
성장	· -		· R&D사업화 등 스케일업 지원 ^{신규} 10개소
주거	· 보금자리주택 신규 4개소		· 보금자리주택 신규 8개소

6-1. 대중교통 요금 할인받고 타세요(K-Pass 도입)

1.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알뜰교통카드’* 도입(‘19년) 후 투자 확대(14→317억원)에도 사용자는 82만명(‘23.7월 기준)으로 **활용률(7.5%) 저조**

* 대중교통 이용시 보행·자전거 이동거리 비례 할인(최대 지원 이동거리 800m)

- **(문제점)** 지원조건(이동거리 요건, 전용 App 설치·작동) 충족 불편, 교통비 정액지원으로 대중교통요금 인상시 실질효과 저하

2. ‘24년 지원방향: 알뜰교통카드 폐지(‘24.6.), K-Pass 도입(‘24.7.)

- **(편리성 강화)** 이동 거리요건을 폐지하여 쉽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
 - 별도 App 설치 및 작동없이 대중교통 이용횟수에 비례한 요금할인으로 정산 관련 불편(이동거리 부정확 등) 해소
- **(할인율 인상)** 교통비 부담 경감(알뜰대비 3.6~7.2만원/년 추가 할인)
 - 일반은 20% 할인으로 年 21.6만원 혜택, 청년은 30% 할인하여 年 32.4만원 혜택, 저소득층은 53% 할인으로 年 57.6만원 혜택
- **(지원방식 변경)** 정률 지원으로 향후 교통비 인상에도 부담 완화
- **(고빈도 우대)** 최소이용횟수 상향(15→21회)으로 고빈도 이용자 우대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구분	알뜰교통카드	K-Pass	효과
일반 사항	이동거리 요건	있음	없음	○편리성 개선
	최소이용 횟수	15회	21회	○고빈도 이용자 우대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방식	정액	정률	○교통비 인상 부담 완화
지원 규모 (할인율) ※500원 기준	일반(20.5만명, 25%)	250원/회(17%)	300원/회(20%)	○교통비 부담 경감 확대
	청년(57.4만명, 70%)	350원/회(23%)	450원/회(30%)	
	저소득층(4.1만명, 5%)	700원/회(47%)	800원/회(53%)	
'24년 예산	지원대상	130만명	177만명	○수혜대상 확대(+176%)
	예산규모	336억원	516억원	

6-2. 청년의 Fun Work, 산리단길로 오세요

1. 현황 및 문제점

□ 산업단지의 열악한 근로·정주환경으로 인해 청년층 근무 기피

- 기존 산업단지 청년근로자에 대한 일률적 소액 현금지원*은 정책효과 불확실 → 근본적인 근무·정주여건 개선에 초점

* 산단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대상 월 5만원 교통비 한시 지원('18.7~'22)

2. '24년 지원방향

◆ 산업단지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문화·편의·주거시설을 확대해 '청년 친화형' 산단으로 근본적 탈바꿈

- ① 살기 좋은 산업단지를 위해 기숙사형 오피스텔, 카페 등 편의시설 조성에 민간투자 1조원 유치(산단환경개선펀드 958→1,868억원)
- ② 청년이 선호하는 문화센터를 100개소로 늘리고, 벽화·가로수·쉼터 등 아름다운 거리도 60개소로 확대(누적 기준)
- ③ 노후공장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 위해 공장 외벽, 화장실·샤워실 개보수 등 '노후공장 리뉴얼'^{신규} 추진(150개사, 30억원)

< 산업단지 환경 개선 변화표 >

	지원내용	'23년	'24년	기대효과
주거·편의시설	산업단지 편의시설 민간투자 확대 (오피스텔·카페 등)	신규 0.5조원 (정부 958억원)	신규 1.0조원 (정부 1,868억원)	산업단지 편의시설 투자규모 누적 8 → 9조원
문화시설	문화센터 건립 (수영·헬스장 등)	누적 70개소	누적 100개소	산단 청년근로자 문화기회 확대
	아름다운거리 조성 (벽화·가로수 등)	누적 32개소	누적 60개소	노후 산업단지 이미지 개선
공장외관	노후공장 리뉴얼 (공장외벽·조경 등)	—	신규 150개사	청년이 일하고싶은 공장환경 조성

6-3.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깎아드립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 취업 평균소요기간이 10.4개월에 이르며, 취업준비 과정에서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부담 확대(평균 응시횟수 年 2.4회)

* '21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중 응시목적: 취업(45.8%) > 자기개발(22.6%) > 업무수행능력향상(11.6%) > 승진·수당(4.6%) > 창업(4.4%) > 기타 등(11.0%)

* 구직활동 지출 중 지원 필요 항목 : 자격시험 응시료(62.2%) > 학원 수강료(54.6%)

2. '24년 지원방향

◇ 청년층 취업준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감면(연 3회) ⇨ 취업준비 비용 2.1 ~ 30만원 경감

□ (사업내용) 청년의 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감면, 年 3회

○ (지원대상) 만 34세 이하 청년, 493개 기술자격* 종목

* 산업인력공단 수행 국가기술자격(정보처리기사, 산업안전기사, 전기기사 등)

○ (사업기간) '24~'25년 시범실시

○ (지원방식) 접수시 응시비용 50% 감면 (242억원 감면)

□ (기대효과) 56만명, 1인당 2.1 ~ 30만원* 지원 효과

* 종목당 0.7~10만원 감면 × 최대 3회

	지원인원	지원내용	효과
응시료 감면	56만명* * '22년 평균응시인원	응시료 50% 연 최대 3회 지원	1인당 최소 2.1~최대 30만원 응시료 부담 경감
※ 응시현황	구분	과목	연간 청년 응시인원
	청년다수응시	정보처리기사	44,543명
		전기기사	38,316명
	최고·최저 응시료	전기기능장	499명
		지게차운전기능사	37,269명
		응시료	57,000원(필기+실기) 57,000원(필기+실기) 201,100원(필기+실기) 14,500원(필기)

6-4. 농업의 미래를 열어갈 청년농 육성

1. 현황 및 문제점

□ 농촌 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 빠르게 진행 중

* 농촌인구비중: ('00) 40대 ↓ 7%, 65세 ↑ 33% → ('22) 40대 ↓ 1%, 65세 ↑ 63%

□ 다만, 청년농 정착을 위한 농지, 주거 등 기초 생활 인프라 부족

* 청년농 조사결과, 영농 중 가장 큰 어려움이 농지 부족(32.5%)

2. '24년 지원방향

◇ 청년이 농업에 진입하면, '농지부터 주거·보육까지' 패키지 지원

○ 청년농 농지지원(1,875→ 3,500ha) 및 주거지원(신규 4→ 8개소) 확대

◇ 성과가 좋았던 청년은 '더 큰 규모로 스케일업까지' 지원

○ 청년농 창업자금 우대보증(85→95%) 및 농식품 TIPS 신규 도입

	지원내용	'23년	'24년	기대효과
농지	1인당 지원 규모	1,400평 (0.46ha) * 4천명에 1,875ha 지원 (8,577억원)	2,100평 (0.7ha) * 5천명에 3,500ha 지원 (12,412억원)	청년농 1인당 농지 지원 규모 +50%
	우량농지 확보 인센티브	-	은퇴직불 활용 규모화 · 우량농지 확보 (126억원)	
주거	청년농촌 보금자리	신규 4개소 (48억원)	신규 8개소 (152억원)	누적 9개 270호 → 17개 510호 (+8개, +240호)
창업	스마트팜 지원	소규모(0.16ha) & 임대형(공공) (-)	대규모(제한 없음) & 분양형(민간) (300억원)	인당 0.16ha→ 1ha 이상도 지원可
	청년농 신용보증	85% (-)	95% (300억원)	청년농 실질 융자 가능 규모 3→ 5억원
성장	스케일업 지원체계	-	농식품 TIPS 신설 (75억원)	농식품분야 유망기업 발굴육성 + 성장 지원

7.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은 나라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 '22년 합계출산율 0.78명, 출생아 수 약 24만명까지 하락하는 등 인구위기 심화 → 저출산 문제에 총력 대응 필요

* 합계출산율(명): ('83) 2.06(인구대체율 하회), ('18) 0.98, ('20) 0.84, ('21) 0.81, ('22) 0.78

2. '24년 지원방향 : ❶출산 가구 주거안정 지원, ❷육아휴직 확대, ❸영아기 육아가구 부담 큰 폭 경감, ❹취약계층 아동 맞춤 돌봄 강화

- ❶ 출산 2년 이내 가구('23년생 이후)에는 소득요건을 2배 완화한 저리 특별융자 및 분양 특별공급, 임대 우선배정 등 신설
- ❷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기간 최초 확대(12→18개월) 및 부모 공동휴직 급여 인센티브 강화(300→450만원)
- ❸ 영아기(0~2세) 양육비용 지원을 2,000만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정원미달 어린이집 추가지원, 아이돌봄 확대 등 지원강화
- ❹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확대로 다문화·취약계층 등 아동돌봄 강화

	'23년	'24년	의미·효과
❶ 출산가구의 확실한 주거 안정			
주거 안정	-	신생아 특별융자 (소득 요건 2배) 신생아 특별공급· 우선배정	○ 출산과 함께 주거 안정 달성
❷ 부모의 자녀돌봄 기회 확대를 위해 육아휴직 지원			
육아 휴직	기간 최대 1년 급여 최대 300 (3+3개월)	기간 최대 1년 6개월 급여 최대 450만원 (6+6개월)	○ 자녀 돌봄에 필요한 육아휴직 유급 지원기간 확대 ○ 부모 맞돌봄 확산으로 여성 양육부담 완화
❸ 영아기 육아가구 양육비용 및 돌봄부담 경감 지원			
양육 비용	부모급여 70·35만원 첫만남 200만원	부모급여 100·50만원 다자녀첫만남 300만원	○ 영아기(0~2세) 2천만원 이상 양육비용 지원
돌봄	어린이집 정원기준 지원 아이돌봄 8.5만 가구	어린이집 영아반 인센티브 아이돌봄 11.0만 가구	○ 어린이집의 안정적 보육서비스 및 틈새돌봄 확대 지원
❹ 취약계층 아동 맞춤 돌봄 강화			
지역 아동 센터	종사자 센터당 2.3명	종사자 센터당 3.0명	○ 통학차량 동승, 돌봄시간 연장 프로그램 다양화 등 맞춤돌봄 확대

7-1. 신생아 출산가구 주거 안정을 위한 3중세트

1. 현황 및 문제점

□ 결혼·출산 문제의 핵심 해결방안은 주거 안정

* 저출산에 대한 경제적 요인 중 **주거요인이 60%로 1위**(국조실, 청년실태조사)

○ 그러나, 현 제도는 결혼 패널티로 작용하여 출산 지연 악순환

□ '06~'21년간 280조원 투입에도 초저출산(0.78, 세계최하위) 지속

2. '24년 지원방향: 맞벌이 패널티 ⇨ '출산가구 집중' 지원

□ 신생아 출산가구에 대해 맞벌이 패널티를 없애고(특례융자 소득 요건 2배 수준 확대), 분양·임대 등 주거안정 인센티브 대폭 강화

○ (융자) 맞벌이로 소득이 높아도 최대 5억원까지 시중금리 대비 $\Delta 1\sim 3\%p$ 저리로 융자 가능 → 연 1천만원 수준 부담 완화

○ (분양·임대) 미혼 청년, 비출산 신혼부부와 경쟁하지 않도록 특별분양 및 임대 우선배정 신설 → 출산과 함께 주거 안정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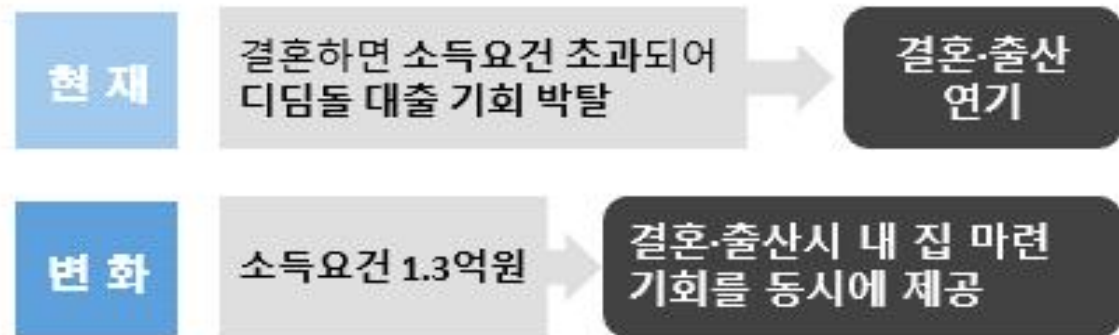
주요 내용		'23년	'24년	기대효과
융자	주택구입·전세자금 저리 대출 신설	-	①소득요건 확대: 6~7천만원→1.3억원 이하 ②높은 한도: 구입 4→5억원 (전세 3억원 유지) ③넓은 대상주택: 구입 6→9억원 전세 4→5억원 ④낮은 금리: 시중대비 $\Delta 1\sim 3\%p$	(기존) 주거 불안정, 내집 마련 지연으로 출산 포기 사례 (변화) 출산과 함께 주거 안정 달성
분양·임대	특별분양, 우선배정 신설	-	○ 분양: 특별분양, 임대: 우선배정 신생아 유형 신설	(기존) 무자녀 신혼부부, 미혼청년과 경쟁 (변화) 별도 유형으로 경쟁률 하락

* '23.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융자·분양·임대 신청前 2년 이내 출산 가구
(예: '23.7.31일 출생아는 '25.7.31일까지 융자·분양·임대 신청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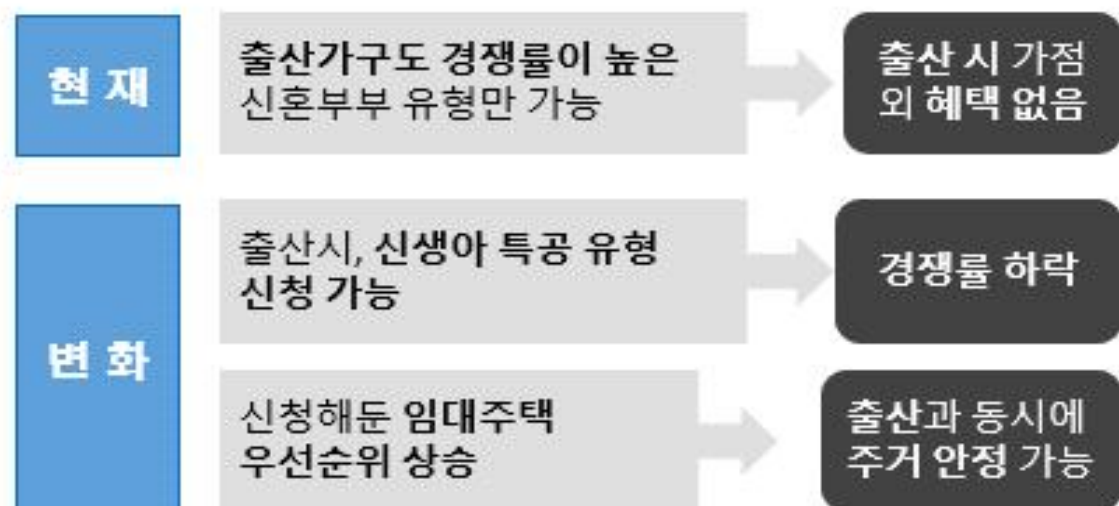
① 신생아 3종 세트 대표 사례

(사례1) 디딤돌 융자 소득요건 완화

각자 소득 5,000만원으로 총 소득 1억원인 맞벌이 커플
 남편 ○○○씨 연소득 5,000만원
 아내 ○○○씨 연소득 5,000만원

**(사례2) 분양+임대 우선배정 등**

출산계획이 있으나, 내 집 마련 부담으로 고민중인 부부



② 신생아 디딤돌 융자 사례

(융자 사례 1) 소득요건 확대

부부합산 세전 연소득 8,800만원인 맞벌이 부부
직장 인사발령으로 인해 서울로 이사갈 계획인데,
최근 연봉 인상으로 소득이 높아져 정책대출 소득요건에
제한이 될지 고민이다

☞ 대출예정금액: 4억원

현 재

(시중은행)
▪ 주담대 이용시 4.5%

연 평균 이자
1,800만원

변 화

(특례디딤돌)
▪ 5년간 2.0%(예시)
▪ 소득 1.3억원 이하

연평균 이자
800만원
* 연 1,000만원 이자 절감

* 대출금리는 예시임

(융자 사례 2) 금리 혜택 확대

부부합산 세전 연소득 6,800만원인 맞벌이 부부
올해 6월 태어난 자녀 양육을 위해 현재보다 넓은 집으로
이사갈 계획으로 추가대출이 필요한데 높은 금리로 고민이다

☞ 대출예정금액: 3억원

현 재

(시중은행)
▪ 기존 디딤돌 2.0

연 평균 이자
600만원

변 화

(특례디딤돌)
▪ 5년간 1.6%(예시)

연평균 이자
480만원
* 연 120만원 이자 절감

* 대출금리는 예시임

7-2. 육아휴직을 1년 6개월로 확대합니다.

① **(기간 연장)** 부모의 자녀 돌봄 기회 확대를 위해 육아휴직
유급 지원기간 연장(1년→ 1년 6개월)

- 다만, 여성의 육아부담 완화, 경력단절 예방 등 위해 최소한의
맞돌봄 조건 3개월 설정(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시에만 연장 허용)

② **(특례 확대)** 휴직시 소득 감소로 남성의 돌봄 참여 미흡 →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위해 영아기 특례 확대 개편

* 남성 육아휴직자(만명) : ('18) 1.8, ('19) 2.2, ('20) 2.7, ('21) 2.9, ('22) 3.8

↳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 : ('18) 17.8, ('19) 21.2, ('20) 24.4, ('21) 26.2, ('22) 28.9

- 부모 맞돌봄시 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영아기 특례의 기간·
급여상한 대폭 확대(3→6개월, 상한 300→450만원*)

*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늘어날수록 상한액 단계적 상향

'23년	'24년	의미·효과
(일반 육아휴직) 통상임금 80% 급여 (상한 150만원)		
기간 최대 1년	최대 1년 6개월 (맞돌봄 3개월 이상시)	○ 자녀 돌봄에 필요한 육아휴직 유급 지원기간 확대
(영아기 특례) 영아기 맞돌봄 기간에 따라 통상임금 80→100% 급여 상향		
자녀연령 생후 12개월	생후 18개월	○ 남성 육아휴직 확대 유도 ○ 부모 맞돌봄 확산으로 여성 양육부담 완화
기간 최대 3개월	최대 6개월	
급여 최대 200~ 300만원 <small>*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한 기간에 따라 상한 월 50만원 상향(200→250→300)</small>	최대 200~ 450만원 <small>*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한 기간에 따라 상한 월 50만원 상향(200→250→450)</small>	

7-3. 영아기 부모의 양육 부담을 크게 줄여 드립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23년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확대·개편, '22년 첫만남이용권 신규 도입 등을 통해 양육부담 지원을 강화

○ (부모급여) '23년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 지원

○ (첫만남이용권) 신생아 출생시 200만원(1회) 바우처 지원

□ **(문제)** 높은 양육비용* + 소득감소(영아돌봄을 위한 휴직 등)로 영아기의 부모 양육부담은 여전히 높은 상황

* 영아가구 평균 양육비 지출 月 91.8만원('21년 보육실태 가구조사)

2. '24년 지원방향

□ ❶ 부모급여 인상(0세 월 70→ 100만원, 1세 월 35→ 50만원)

❷ 다자녀 가구 첫만남이용권 지원 확대(200→ 300만원)

□ 영아기 2년간 양육비용 지원을 1,460만원→ 2,000만원 이상*으로 확대, 소득 감소·양육부담이 큰 영아기·다자녀 가구를 두텁게 지원

* 첫째아 2,000만원(첫만남200 + 부모급여1,800), 둘째 이상 2,100만원(첫만남300 + 부모급여1,800)

	'23년	'24년	의미·효과
❶ 첫만남이용권 다자녀 추가혜택 신설 ('23년 0.3→ '24년 0.4조원)			
첫만남	모든 자녀 각 200만원 지원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지원	○ 양육부담이 큰 2자녀 이상 가구 지원 강화
❷ 부모급여 70·35→ 100·50만원 인상 ('23년 1.6→ '24년 2.3조원)			
부모 급여	0세 月 70만원 1세 月 35만원	0세 月 100만원 1세 月 50만원	○ 부모 소득 감소가 큰 영아기 아동 양육지원 강화

7-4. 언제 어디서나 보육·돌봄을 이용 가능하도록 지원

1. 현황 및 문제점

- 출생아 수 감소로 정원 충족이 어려운 어린이집¹⁾의 폐원 증가²⁾, 영아반 부족³⁾ 등 영유아 보육시설 이용 애로 발생

* 1) 정원충족률('21년): 전체 76.1%(국공립 82.5%, 가정 80.4%, 민간 74.8%)

2) 어린이집 개소(만 개): ('20년) 3.5 → ('21년) 3.3 → ('22년) 3.1(연 △0.2만개)

3) 연령별 반 없는 어린이집(%): (0세반) 42.4, (1세반) 27.2, (2세반) 24.3

- 부모의 출퇴근 시간 등하원 등 맞벌이 가구 등에 일시적 돌봄을 지원하는 틈새돌봄(아이돌봄 서비스*·시간제 보육)은 공급 부족

* 서비스 대기기간 평균 27일, 서비스 신청 후 연계율은 70% 수준('22년)

2. '24년 지원방향

- (보육인프라) 등록아동(현원) 기준으로 지원하는 보육료를 최초로 '반별 정원' 기준으로 추가 지원*하는 **영아반 인센티브 신설**

*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인 0~2세반에 정원미달 아동 1인당 보육료 일부를 추가 지원

○ 보육료는 물가상승률 전망(2.3%)의 두 배 이상인 **5% 인상**

⇒ 어린이집의 경영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

- (틈새돌봄) 아이돌봄 8.5→11만명, 시간제보육 1→2천개 반 지원

	‘23년	‘24년	의미·효과
① 보육 인프라: 정원미달 영아반(0~2세) 추가지원 + 보육료 5% 인상			
영아반	등록아동 기준 보육료 지원	반별 정원기준 보육료 추가지원	○ 어린이집이 안정적 보육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보육료 인상률: (‘23년) 4% → (‘24년) 5%
보육료	아동 1명당 최대 111.3만원	아동 1명당 최대 116.9만원	
② 틈새돌봄: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보육 공급 확대			
아이돌봄	8.5만 가구	11.0만 가구	○ 가정양육 아동이 필요한 경우 일시·단기 돌봄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제	1,030개 반	2,315개반	

7-5. 지역아동센터에서 보다 세심하게 돌보겠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 지역아동센터는 다문화, 경제, 정서적 어려움을 가진 아동들의 이용이 많아 복잡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 지원 필요성 증대

○ 지역아동센터는 센터별 2.3명 종사자가 평균 25.6명의 아동을 돌보는 중

※ (참고) 지역아동센터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기관의 일종으로 '공부방'으로 시작, 2004년 법제화되어 방과후 학습, 놀이활동 제공 등 지역사회 아동돌봄을 지원

2. '24년 지원방향

□ (인력증원) 맞춤형 돌봄수요 지원을 위해 25인 이상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에 각 1명씩 총 3,001명 생활복지사 추가배치 지원

○ 통학차량 동승, 20시까지 초등돌봄 확대, 돌봄 프로그램의 다양화 등 지역아동센터 돌봄 서비스 확충 추진

□ (운영비 지원) 인력증원(3,001명) 및 처우개선(2.5%) 등 운영비 추가 지원으로 질 높은 돌봄환경 제공

○ ('23) 월 786만원 → ('24년) 월 904만원

	'23년	'24년	기대효과
센터수	4,180개소	4,186개소	○ 아동돌봄인력 부족문제 해소 및 취약계층 아동에 세심한 돌봄서비스 제공
종사자	센터당 2.3명	센터당 3.0명	
1인당 돌봄아동	11.1명	8.5명	
운영비 지원	월786만원	월904만원	○ 질 높은 양육환경 제공

8-1. 태어난 직후 모든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준비를 지원합니다.

1. 추진경과

□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초기 목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중(月 5만원 적립시 10만원 매칭, 디딤씨앗통장)

○ ('07년) 보호대상아동 → ('11년~)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확대

* 가입연령: ('11년) 만 12세 → ('16년) 만 12~13세 → ('18년~) 만12~17세

2. '24년 지원방향

◇ ① 모든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은 ② 태어난 직후부터 자립준비 지원

① 모든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

- ('23년) 생계·의료급여 대상 → ('24년) 주거·교육급여 대상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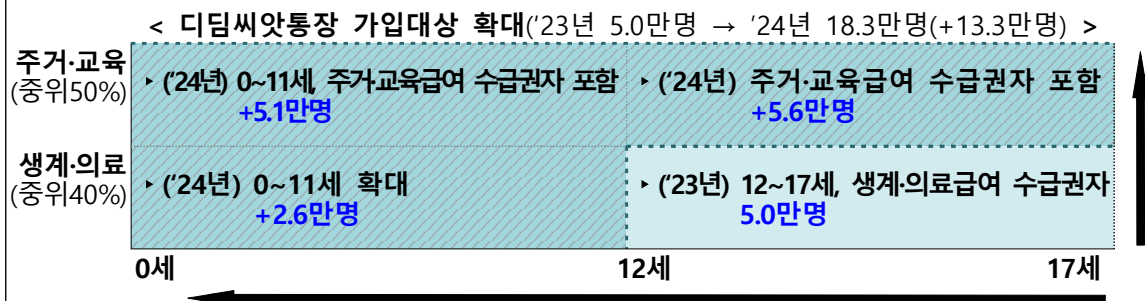
②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이 태어난 직후부터 자립 지원

- ('23년) 만 12~17세 대상 → ('24년) 만 0~17세 대상

⇒ 지원인원 5.0 → 18.3만명, 지원규모 1,080 → 3,240만원(원금기준), '23년 대비 3배 수준으로 지원 확대

	'23년	'24년	의미·효과
소득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까지 확대	○ 사각지대의 기초수급가구 아동을 모두 지원(5.0 → 18.3만명)
연령	12~17세	0~17세	○ 아동이 태어난 직후부터 자립준비를 통해 충분한 목돈마련 지원(1,080 → 3,240만원, 원금기준)

※ (예산) '23년 499억원 → '24년 1,267억원 확대



8-2. 소아·응급환자 의료공백을 메우겠습니다.

1. 현황

- 최근 소아과 폐과선언*,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 등 필수의료체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

* 최근 5년간 소아과 662곳 폐업 / ** 응급실 뺑뺑이건수 연간 약 7,364건('21년 기준)

2. '24년 투자방향: 적기에, 적절한 장소에서, 적합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 (소아) 경증부터 중증질환까지 24시간, 거주지인근에서 상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아의료기반 구축
- * 24시간소아상담센터(5개소, 신규), 달빛어린이병원(45개소, 신규), 소아암거점병원(5개소, 신규) 등
- (응급) 응급환자 발생부터 치료까지 지역내에서 신속한 최종치료가 가능하도록 전 과정 연계강화

* 지역응급상황실(4개소, 신규), 닥터헬기(8→9대), 닥터카(1대, 신규), 전문의순환당직제(신규) 등

사업 내용		'23년	'24년	기대효과
① 소아의료: ('23) 62 → ('24) 334억원(+272억원, +436.6%)				
경증 (야간·휴일)	달빛어린이병원	—	45개소(45억원)	야간·휴일 진료 가능
	24시간 소아전문상담센터	—	5개소(46억원)	24시간 의료상담 가능
응급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10개소(52억원)	12개소(78억원)	소아전문의가 있는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 응급, 중증질환, 암치료 가능
중증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12개소(10억원)	14개소(61억원)	
	소아암거점병원	—	5개소(63억원)	
인력	전공의 수련수당	—	월 100만원(44억원)	소아청소년분야 의료인력 부족문제 단계적 해소
② 응급의료: ('23) 718 → ('24) 1,026억원(+383억원, +42.9%)				
이송	지역응급상황실	—	4개소(100억원)	최적병원 이송
	닥터헬기	8대(226억원)	9대(234억원)	이동형 응급실에서 이송중 응급치료 가능 (의료진 탑승, 의료장비 탑재)
	닥터카	—	1대(4억원)	
최종치료	전문의 순환당직제	—	17개 시도(51억원)	지역 내에서 최종 응급수술 가능

9. 글로벌 생태계를 주도할 꿈의 Flagship 프로젝트

1. 현황 및 문제점

- 그간의 급격한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경제·사회적 난제 해결형 R&D가 아닌 나눠먹기식 소규모·쉬운 R&D로 질적 성과 미흡

* 10조원→20조원('08~'19, 11년 소요), 20조원→30조원('19~'23, 4년 소요)

2. '24년 지원방향

◇ 대규모·도전적 과제 추진 ⇒ 혁신성과 창출

- 예타 면제가 확정된 「KARPA-H」(바이오 난제 해결)와 「우주산업 삼각체계 클러스터 구축」(발사체-위성-인재개발) 프로젝트 추진

	총사업비	구분	사업내용
KARPA-H 프로젝트	1.9조원	보건안보 확립	○ 바이러스 유전자 직접 억제 치료제 개발
		미정복질환 극복	○ 맞춤형 암 예방 백신 개발
		필수의료 확충	○ 국립대병원 중심 연구인프라 구축
		바이오헬스 혁신	○ 초거대 AI 활용 신약 생산기술 개발
		복지·돌봄 개선	○ IOT·로봇 기반 돌봄환경 조성

	총사업비	구분	사업내용
우주 삼각체계 클러스터 구축	0.6조원	발사체	○ 발사장·연소시험시설 + 사업화센터 구축
		위성	○ 우주환경시험 시설 + 위성 개발혁신센터 구축
		연구·인재개발	○ 혁신 인재 양성센터, 우수인력 양성

- 주력산업(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의 「초격차」와 변혁적 기술 개발을 위한 「한계도전 R&D」 프로젝트도 추진

	총사업비	구분	사업내용
초격차 프로젝트	1.6조원(잠정)	반도체	○ 미세공정 한계 극복 첨단패키징 기술 개발
		이차전지	○ 모빌리티용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 개발
		디스플레이	○ Post-OLED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총사업비	구분	사업내용
한계도전 R&D	1.4조원(잠정)	과학기술	○ 기술 조합 or 도전적 시도로 변혁적 기술개발
		디지털	○ AI 활용 공공·산업분야 초격차 기술 확보

10. 민간투자 614조원, K-첨단클러스터가 앞장섭니다.

- ◆ 금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개소 최초 지정
→ ①금융, ②인프라, ③인력 양성 등 종합 지원체계 구축
- 총 +0.4조원 투자로 민간투자 614조원 유치 마중물 수행

특화단지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용인·평택	구미	포항	청주	울산	군산	천안아산
지원체계	금융지원 (<small>신규</small> 1,000억)		+	인프라 (<small>신규</small> 154억)		+	인력양성 (+2,778억)
							α (인허가특례 등)

1 [금융지원] 「가칭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용자」 신설 (신규1,000억원)

-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중견·중소기업(특화단지 입주기업 우선)에 대해 기술 실증·상용화 촉진을 위한 저리용자 신설
- 기존의 '나눠먹기식' 소액 지원 방식에서 탈피하여 민간 금융 기관을 활용하여 핵심기술 사업화에 집중 지원

2 [인프라]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 지원 (신규154억원)

- 용수, 전력, 도로, 폐수 등 핵심 생산 기반시설 지원*
- * 투자규모 등 고려하여 총사업비 5~30% 국고 지원 예정(최대 500억원)
- '24년은 착공이 확정된 특화단지 용수시설 구축 지원(1개소)

3 [인력양성] 첨단분야 인력양성 규모 확대 (총 1.9조원, +2,778억원)

- 기업과 대학이 협업하여 산업현장 맞춤형 실무교육 제공

< 핵심 사업 변화표 >

	지원내용	'23년	'24년
대학	특성화대학	8개교 (반도체 8개 대학)	21개교 (반도체 18, 이차전지 3개 대학)
대학 + 기업	첨단 부트캠프	10개교 (반도체 10개 대학)	42개교 (반도체 27, 디스플레이 4, 이차전지 4, 바이오 4개 대학 등)
기업	아카데미	520명 (반도체 520명)	1,400명 (반도체 800, 이차전지 600명)

11. 탄탄한 자원 공급망, 튼튼한 에너지 안보

1. 현황 및 문제점

□ 주요국의 수출 통제* 등 에너지·자원 공급망 불안 확대

* '23.7.3일, 중국정부는 반도체 등과 밀접과 갈륨·게르마늄의 수출 통제 발표

- 국내 공공부문의 핵심광물 비축분이 부족하고, 해외 수입 의존도도 80%에 달하는 등 자원안보 취약

2. '24년 지원방향

◆ ①핵심자원 공공비축, ②국내생산설비 확충, ③공급선 다변화, ④국산화 R&D 등 공급망 안정화 투자를 3.4→3.7조원으로 확대

⇒ '30년까지 핵심광물 100일분 비축 + 수입의존도를 50%로 완화

① 핵심광물, 석유 등의 공공비축을 획기적으로 확대 (1.0→1.3조원)

	목표	'23년	'24년
핵심광물 (13개)	100일분 (~'31년)	평균 42일분 (코발트 +45일분)	평균 60일분 (리튬 +24일분, 희토류 +1년분 등)
석유	1억배럴 (~'25년, 130일분)	누적 9,827만배럴 (+36만배럴)	누적 9,859만배럴 (+32만배럴)

② 국내외자원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로 공급선 다변화 (0.08→0.10조원)

	'23년	'24년
해외자원개발특별용자	사업비의 30% 용자(368억)	최대 50% 용자(398억)
유전개발사업 출자	사업비의 최대 40% 출자(301억)	최대 50% 출자(481억)

③ 외국인투자·국내유턴기업 지원 강화로 국내 생산설비 확충 (0.1→0.3조원)

	'23년	'24년
현금지원 비율	투자액의 최대 40% 지원	최대 50% 지원
지원규모	1,070억원	3,000억원

④ 핵심산업 품목에 대한 국산화 R&D 강화 (2.3→2.1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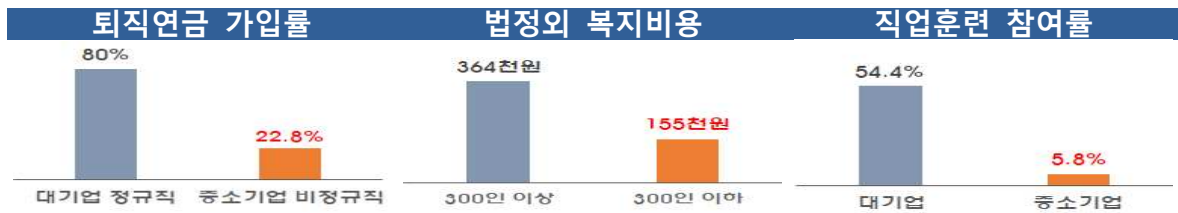
- 소재·부품·장비(119개 품목), 주력 제조업(자동차·조선·철강 등), 첨단산업(반도체 등)의 대외의존도 개선을 위해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

12. 노동시장 이중구조, 상생협력으로 극복합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 임금 등 대기업·정규직(12%), 하청·비정규직(88%) 격차 고착화
→ 노동시장 경직성, 기업 구인난·미스매치 심화 등 초래

* 시간당 임금(원청=100): 1차 협력사 63.0, 2차 협력사 61.2, 영세사업장 57.1



2. '24년 지원방향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1,765억원, +59.1%)

- (연공급→직무성과 임금개편)** 컨설팅 지원, 임금·직무 정보 제공
 - 조선업 등 업종별(신규 3개)·사업장별(150개소) 임금개편 컨설팅
 - 시장임금·직무정보 통합 제공시스템 구축(27억원)
- (원하청 상생협력)** 대기업·원청 → 하청기업 복지·훈련 지원
 -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신규 100억원) 등 상생협력 이행 지원, 타업종·지역으로 확산 위한 패키지 신규 지원(189억원)
 - * 2년간 자부담·원청·지자체·국가 각 200만원 → 총 800만원 자산형성 지원
 - 원청 출연 → 하청 근로자 복지 위한 기금 조성 확대
 - (공동복지기금^{1차협력사}) 정부 매칭한도 2배(10→20억원) 확대
 - (상생연대기금^{2·3차 업종전반}) 노노 상생지원 포함, 신규 조성(50억원)
 - 대기업 교육과정 개방 → 대중소상생아카데미(100개과정) 신설
- (격차완화)** 중소·하청기업 산업안전, 노후소득 보장 강화
 - 위험공정 교체 지원업종·대상기업* 대폭 확대(0.2→0.4만개소)
 - * 지원업종: 뿌리+고위험 3대 업종 → 고위험 6대 업종까지 추가
 - 지원대상: 원청 비용분담시 50인 → 300인 기업까지 지원 확대(+488개소, 신규)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저소득 근로자 지원금 신설(퇴직연금기여금의 10%) → 퇴직연금 가입 촉진, 노후소득 보장 강화

13. 첨단서비스 분야의 ABCD

1. 추진배경

- 핵심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선택과 집중 투자를 통한 글로벌 리더 국가로 도약
 -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AI·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업간 융합을 통해 핵심과제들을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필요
 - 특히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바이오와 사이버보안은 AI 등장으로 신산업을 창출하는 핵심 분야로 부상
 - * 첨단 바이오, 사이버보안, AI,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우주항공·해양, 수소,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 한편 주요국의 경우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美, AI 활용 고령자 돌봄서비스) 추진중

2. 실현방안

- 민간의 자율과 창의 등을 활용하여 첨단 분야의 기술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디지털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 (AI) 민간 중심의 AI 기술·서비스 개발에 대한 지원을 통해 AI와 산업간 융합을 촉진하고 초거대 AI 생태계 조성
 - (Bio) 바이오 난제 해결 및 보건의료 기술 확보 등을 위한 「KARPA-H」 프로젝트* 및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추진
 - * PM 중심의 자율적 의사결정 방식인 美 DARPA형 벤치마킹
 - (Cyber Security) 민간 자본 등을 활용한 보안 산업 육성을 위해 '사이버보안 펀드' 조성, 제로트러스트 신보안체계 실증·확산 추진
 - (DPG) 공공 데이터와 민간의 창의적 융합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 제공

⇒ 디지털 산업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신산업 원천기술 확보 및 융합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대국민 서비스에 디지털 신기술 적용

13-1. AI: 산업 초격차와 국민 체감의 인공지능 시대

1. 현황 및 문제점

- 초거대AI가 산업 난제해결을 지원하는 등 쏠산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필수요소로 부상
- 아직 기업현장·국민생활 등에서 인공지능 활용은 초기 단계로, AI 산업·기술 초격차 실현과 국민과 인공지능 혜택 공유 필요

* 그간 우리나라는 데이터 축적(학습용데이터 691종), AI 기술력 향상(美 대비 89.1%) 등 기반 조성에 집중

2. '24년 지원방향 : ['23년] 10,384 → ['24년] 12,028억원, +15.8%

◇ 인공지능 융합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민간·공공 서비스 혁신 중심 인공지능 분야 투자 확대 ⇒ 초격차 실현과 국민 체감 제고

- ① (AI 생태계 조성) 반도체·바이오·디지털 통신 등 첨단산업에 인공지능을 적극 접목한 신기술 개발

* 예: 인공지능 연산 처리를 위한 AI 반도체를 개발하여 반도체 산업 초격차 유지·확산

▪ AI 윤리성·국제적 규범 확립 등 디지털 新질서 창출에 주도적 참여

- ② (민간·공공 활용) 법률·의료 등 일상생활 영역에서 AI 기반 전문가 서비스를 개발하고, 공공영역에도 선도적으로 활용

* 예: 초거대AI 기반 5대 전문분야(법률·의료·심리·미디어·학술) 서비스 개발 등

	사업	사업내용	'23년	'23년
AI 생태계 조성	AI 반도체기반 데이터센터 고도화 선도기술 개발	인공지능 기반 반도체바이오 기술개발 신규 R&D	-	75억원
	AI반도체 첨단 이중 집적 기술개발		-	83억원
	국가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	619억원
민간·공공 활용	초거대 AI 기반 전문가 서비스 개발(5대 분야)	법률·의료·심리·미디어·학술 분야 초거대 AI 기반 전문가 서비스 개발	-	383억원
	부처협업 기반 AI 확산	부처협업 AI 솔루션 개발 실증(7 → 17개 과제)	80억원	240억원

13-2. Bio: 신산업 창출 및 국민 삶의 질 개선에 투자

1. 현황 및 문제점

- 바이오 경제 선점을 위해 국가 간 경쟁 본격화, 그러나 우리는 투자 부족*, 컨트롤타워 없는 분절적인 R&D 수행 및 전략성 결여

* 주요국 R&D 예산 中 보건의료비중('20, OECD) : 美 28%, 英 21%, 우리나라 7%

- 아울러, 분야 전문성을 가진 보건의료부처(복지부·식약처·질병청 9,184억원) 보다 과기부 등 기타부처(9,470억원)에서 더 큰 규모의 R&D 수행

2. '24년 지원방향 : ('23년) 18,654 → ('24년) 19,442억원, +4.2%

◇ 기능·예산 조정, 첨단바이오 투자 확대, 「보스턴-코리아」와 같은 전략적 R&D 추진 ⇒ 기술경쟁력 확보·먹거리 창출 + 국민 삶의 질 개선

- ① 바이오 R&D 예산을 분야 전문성이 높은 복지부 중심으로 재편하여 투자 효율성 제고
- ② 미래 유망 산업인 첨단바이오(바이오+AI·데이터 등 디지털 융합) 분야 투자를 확대하여 기술 경쟁력 확보 및 미래먹거리 창출
- ③ 첨단바이오 분야 신진기술 흡수 및 핵심인재(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를 '탐-코리아'로 추진

	구분	내용	'23년	'24년
기능·예산조정	전체 바이오 예산 中 복지부 등 보건 의료부처 비중	복지부 중심으로 바이오 예산 재편	9,184억원 (49.2%)	10,265억원 (52.8%)
첨단바이오	12대 전략기술인 첨단바이오 예산	투자 확대	8,288억원	9,626억원
전략적 투자 확대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바이오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공동연구	-	864억원

13-3. Cyber 보안: 정보는 공유하고, 보안은 강화

1. 현황 및 대응방향

- (현황) 기관 간 칸막이와 함께 보안 체계도 방화벽 기반으로 이루어지면서 HW 중심의 보안 체계 → 정보·데이터 공유 한계
- (대응방향) 사이버보안 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해 SW 중심 보안 체계로 전환 → 기관 간 정보·데이터 공유 활성화

* 우리나라 사이버보안 시장 양적 규모는 확대('18년 10 → '22년 16.2조원)했으나, 글로벌 시장('23년, 약 394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에 불과

** '22년 국내 보안 기업 기술개발 및 성장 애로 사항 1위(40.8%)는 자금조달

2. '24년 지원방향 : ('23년) 3,117 → ('24년) 3,656억원, +17.3%

- ◇ 안정적 자금 공급으로 신기술 개발 및 핵심 원천기술 확보 지원
- ◇ 선제적 탐지 및 대응체계 구축으로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강화

	사업	사업내용	'23년	'24년
사이버보안 산업	사이버보안펀드 조성	안정적 자금 공급 및 스타트업 성장·발굴 지원	-	200 억원
	정보보호 핵심 원천기술 개발(R&D)	공공 서비스 데이터 및 네트워크 보호를 위한 원천 기술개발	755 억원	1,076 억원
사이버보안 역량	제로트러스트* 신보안체계 실증확산	비신뢰 기반 보안 패러다임 전환	-	62 억원
	사이버위협 통합 탐지대응	AI 기반 사이버 위협 정보 연계·분석 및 대응	-	90 억원

* 제로트러스트(Never trust, Always verify) : 모든 자산(서버, 보안시스템, 데이터 등)에 대한 접근권한을 지속 검증하는 신보안체계

13-4. Digital플랫폼정부: 「국민 수요를 충족하는 디지털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 디지털플랫폼정부 :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Value를 창출하는 정부

1. 현황 및 문제점

□ 20년간 11백개 기관이 17천개 시스템 개별 구축

	전자정부 (Before)	⇒	디지털플랫폼정부 (After)
서비스 제공방식	공급자(정부) 위주		수요자(국민) 맞춤형
정부 데이터	데이터 축적 및 제한된 연계		자유로운 연계 및 활용
정부역할	모든 서비스 구축·제공		플랫폼 제공 및 민간 주도 서비스 지원

2. '24년 지원방향: ('23년) 4,192억원 → ('24년) 9,262억원

	주요사업	'23년	'24년	의미·효과
◇ (국민체감)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통합적·선제적·맞춤형으로 제공				
국민 체감	행정서비스 통합플랫폼	각각 로그인	6개 포털 1회 로그인 * 정부24, 홈택스, 복지로, 고용24, 나이스, 가족관계	각각 로그인 불편 해소
	시 기반 고용서비스통합플랫폼	9개 서비스 개별 신청 * 워크넷, 취업이름 등	고용24(가칭)에서 통합 제공	맞춤형개인별 바면 서비스 제공
◇ (기업) 공공 데이터 개방 및 민간과의 융합으로 새로운 서비스 창출				
기업	디지털서비스 개방	23종 * SRT승차권, 자동차 검사 예약 등	40종 * 예방접종조회, 여권재발급 신청 등	민간업체에서 공공서비스 신청 또는 이용
	공장설립 인허가 플랫폼	대행사 의존	사전진단 서비스 제공 * 입지 후보지, 입체도면 제공	인허가 처리 시간비용 절감
◇ (정부) 공공 데이터 연계·통합 및 플랫폼 구축 등 다플정 혁신 생태계 조성				
정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무음정보 101종(누적) *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	무음정보 130종(누적) * 프리랜서 출산급여, 실업급여 신청 등	개인이 동의하면 기관간 데이터 공유·활용

14. 세계로 뻗어나가는 K-콘텐츠

1. 현황 및 문제점

- 세계 콘텐츠 시장(2.5조달러)의 확대*, K-콘텐츠 한류(시장 점유율 2.8%, 세계 7위)에 힘입어 콘텐츠는 수출·일자리 분야 핵심 산업이나,
 - * 세계 자동차 시장(2.8조 달러)에 버금가는 대형시장, 향후 5년간 5% 성장전망
- 글로벌 OTT의 K-콘텐츠 투자에 따른 IP 확보 문제*(넷플릭스 등), 금리 인상 등 제작비 급증으로 콘텐츠기업 제작여건 악화
 - * (넷플릭스) '22년 8천억원 투자, '오징어게임' 제작 지원(250억) 후 IP로 수익 1조원 독점

2. '24년 지원방향 : K-콘텐츠 성장자금 역대 최고 공급지원

- 기업 자금난 해소, 대형 콘텐츠 IP 확보 등 콘텐츠 수출 전방위 지원을 위해 '24년 정책금융 1.8조원 추가공급('23 0.8→'24안 1.8조원)

정 책 금 융		'23년 공급8,300억원 (예산2,220억원)	'24년 공급1조 7,700억원 (예산4,260억원)	기 대 효 과
펀드	모태펀드	공급4,500억원 (예산1,980억원)	공급6,900억원 (예산3,150억원)	자금난 해소, 독자 IP 확보
	전략펀드	-	공급6,000억원 (예산800억원)	대형 콘텐츠 자금시장 조성
보증	선판매계약 보증	공급2,200억원 (예산200억원)	공급2,400억원 (예산250억원)	담보 한계 극복, 대출 실행
대출	이자보전(2.5%p)	공급1,600억원 (예산40억원)	공급2,400억원 (예산60억원)	이자부담 완화

- ① (펀드) 콘텐츠 제작·수출 전폭 지원 → 자금난 해소, 독자 IP 확보지원
 - 특히, 대규모 콘텐츠 제작(100~500억원대) 및 글로벌 OTT 공세에 대한 IP 확보를 위한 「민관합동 전략펀드(K-콘텐츠 전략펀드)*」 신규 추진
 - * 정부출자(800억/문체부·과기부), 산은, 민간기업 등이 투자하는 총 0.6조원 펀드
- ② (보증·대출) 先판매계약 체결기업에 완성보증 지원('24공급 2,400억원) 및 기업 제작자금 대출이자 일부(2.5%p) 지원 병행('24공급 2,400억원)

15.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① 지역활성화펀드

“기업이 모이는 지방”

국가가 위험을 분담하고, 펀드를 조성하여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사업을 지원

Before

- 소규모 지역사업에 정부보조금 지원
- 지역경제 파급효과 없이 낭비 초래

After

- 재정의 마중물로 풍부한 민간자금 유입
- 스마트팜, 복합 관광리조트 등 보다 수익성 높은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

구분 (억원)	'23년	'24년안	증감	%	주요 내용
지역활성화펀드	-	1,000	1,000	순증	국가-지방-민간 1,000억원씩 조성

② 지역중심대학

“인재가 모이는 지방”

대학에 대한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 지방대를 글로벌 대학으로 집중 육성

Before

- 중앙정부·공급자 위주 대학 지원
- 대학이 지역 경제·산업발전과 분리

After

- 지역·수요자 중심 대학 지원
- 지역인재양성으로 지역·대학 동반성장, 혁신역량의 글로벌 대학 30개 육성

구분 (억원)	'23년	'24년안	증감	%	주요 내용
지역중심대학	20,658	23,784	3,126	15.1	30개 글로벌 대학에 5년간 교당 1,000억원 지원

③ 지역자율투자

“사람이 모이는 지방”

통근·통학·관광 등을 위해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을 늘리기 위한 지역 자율형 프로젝트 지원

Before

-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중심의 소멸대응
- 지역간 인구 뺏기 경쟁(zero-sum)

After

- 일·학습·여가 등 생활근거지를 두고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 중심의 소멸대응
- 지역간 인구 공유하기(win-w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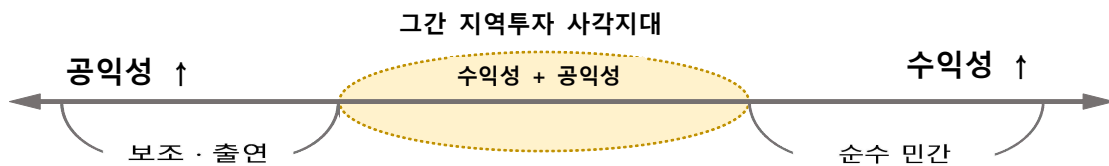
구분 (억원)	'23년	'24년안	증감	%	주요 내용
지역자율투자	24,550	32,555	8,005	32.6	인구감소 시·도에 3년간 50억원 지원 (소멸대응 위한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참고 1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 사업개요 : '24년 모펀드 3천억원 신규 조성

- (목적) 官 주도의 단발적·소규모 지역투자에서 벗어나 민간의 자금과 역량을 활용하여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 추진
- ☞ 실제 “일자리”와 “사람”이 모이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도모



- (대상) 수도권 소재, 사행성 사업 등 펀드 목적과 공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프로젝트 추진(Negative 방식)
* (예시) 대규모 스마트팜,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복합 관광리조트 등
- (구조) 정부 및 정책금융기관이 모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민간이 자펀드 결성, SPC 설립 등을 통해 PF 추진

모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가 마중물 투자(재정 +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출자 ▶ 독립적인 투자심의위원회가 투자 여부를 결정
↓	
자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펀드 투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모펀드 재원을 후순위 출자 ▶ 민간 금융사가 운용사로 LP(모펀드, 지자체(선택사항) 등) 자금 관리
↓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시행사, 지자체로 구성된 사업시행자(SPC)가 프로젝트 추진·관리 ▶ 모펀드 등의 출자를 받은 자펀드가 프로젝트에 투자 ▶ PF 대주단(민간 은행권 등) 대출도 활용하여 자금 조달(특례보증 제공)

2. 향후 추진계획

- 지자체 사업 발굴 컨설팅 및 각종 규제 개선과 더불어
'24년 모펀드 출자예산 확정, 모펀드 운용사 선정 등 연내 완료
- ☞ '24.1월 모펀드 출범 + 1/4분기내 사업 선정 개시

참고 2

지역중심 대학 혁신

1. 현황 및 문제점

- 학령인구 감소*, 지방소멸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자율적 혁신 등 경쟁력 강화 노력 부족

* '24년부터 대학입학대상 인원이 최초 30만명대 진입 예상('19년 52.6→'24년 37.3만명)

2. '24년 지원방향: ('23) 20,658 → ('24안) 23,784억원(+3,126억원)

- 대학 자율혁신 유도를 위해 대학재정지원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여 지역주도·상향식·성과중심으로 전환

- ① (지역주도) 대학에 대한 재정권한을 지자체로 부여(RISE)*, 30개 지방대를 글로벌 대학**으로 선정하고 집중 투자

* RIS(지역혁신) 등 7개 사업 통합, ** '23~'26년간 총 30개 대학 선정, 교당 1,000억원 지원

- ② (상향식) 교육부 주도 대학역량평가를 대학 협의체 주도로 전환, 사립대 자발적 구조개선 경영자문 확대*, 학사제도 자율개편 지원**

* 사립대학 경영자문 컨설팅 지원(30개교, 53억원 지원)

** 자율학사제도 모델 개발 위한 대학 학사자율역량 기반조성^{신규}(5억원)

- ③ (성과중심) 대학일반재정지원 사업의 성과배분 비율 확대

* 대학혁신지원(30→36%), 국립대학 육성사업 및 지방대 활성화(40→60%)

< BEFORE >	< AFTER >
중앙정부·공급자 중심 교육	→지역수요자 중심대학(RISE), 대학-지역 동반성장
학과간, 대학간, 대학과 지역간 칸막이	→대학내, 대학간, 대학-지역간 벽 허물기
모든 대학에 나눠주기식 재정지원	→성과 중심, 글로벌 대학30 집중 투자
학령인구 감소로 경영위기 대학 증가	→선제적 대학 구조개혁

참고 3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국토부, 지특회계/지원계정)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합계	연차별 투자계획		
		'24	'25	'26
■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45,000 (5,000 x 9개소)	13,500 (5,000 x 30% x 9개소)	18,000 (5,000 x 40% x 9개소)	13,500 (5,000 x 30% x 9개소)

1. 사업 필요성

- 저출산에 따른 총인구 감소로, 지역에 거주하는 '정주인구' 확충 통한 지방소멸 대응에 한계 ⇒ 생활·체류인구* 확충 필요

* 지역에 정주하지는 않으나 일정기간 체류하면서 일정한 생활을 영위하는 인구

2. 사업방향

- (지원내용) 지역내 존재하는 빈집·폐교 등 리모델링을 통해 외부인의 주기적·반복적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 위케이션센터(공유오피스 + 숙소), 세컨드하우스, 양봉·양조 등 취미형 창업연계시설 등

〈 생활·체류인구 확충방향 〉	〈 사업추진방향 예시 〉
	<p>[A시] 거점도시</p> <p>[a군] 위케이션(관광 + 재택근무) 특화 → A시 근로자들이 a군에서 재택근무</p> <p>[b군] 체류형 체험활동(목공·화훼 등) 특화 → A시 주민들이 주말에 b군 체류</p> <p>[c군] 의류·가구 등 소비단지 특화 → A시 주민들이 c군에서 소비</p>

- (지원방식) 광역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 맞춤형 사업을 기획한 후 중앙정부와 협약 체결시, 이에 대한 재정지원

* (분권및균형발전법 제42조 : 지역발전투자협약) 국가-지자체, 지자체간 균형 발전사업 추진 위해 체결하는 협약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 (지원규모) 광역지자체 1개당 최대 3년간 50억원 지원(총 9개)

- (선정기준) 지역 자율에 따른 사업 기획을 위해 절대평가 방식을 활용하여, 9개 지자체 중 심사기준을 통과한 지자체만 지원

16. 농업직불 예산 3조원 달성

1.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농업소득 하락→ 소규모 농가 더 취약

* '22년 농업소득 변동률(전년대비, %) : (전국) △26.8, (0.5ha 미만 소농) △43.2

□ 고령화, 쌀 위주 영농 등 농업·농촌의 취약한 구조 심화

* 인당 年소비량 및 자급률(kg, %, '21): (쌀) 57.9/84.6, (밀) 36.9/1.1, (콩) 6.4/23.7

2. '24년 지원방향

- ◇ ①농업인 **소득안정** 과 고령화, 쌀 위주 영농 등
②취약한 농촌구조 전환의 핵심 Key =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 ◇ '20년 직불예산 2.0조원 달성('19년 1.4→ '20년 2.4조원) 이후
4년만에 **농업직불 예산 3.0조원 달성**('23년 2.8→ '24년案 3.1조원)
- ※ (국정과제)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원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27년)

①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

- 소규모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소농직불금' 4년만에 10만원 인상
- 가격 변동이 큰 농산물 대상 '수입보장보험' 확대

	현행('23)	'24년案	기대효과
소농직불	120만원 (6,500억원)	130만원 (+10만원 인상) (7,070억원)	농가 경영안정 강화
수입보장 보험	기존 7개 품목 운영 (25억원)	가격변동성 높은 사과, 배, 감귤 추가 (81억원)	

② 젊은 농촌, 생산성 높은 농업으로의 전환

- 고령농이 우량농지를 청년세대에 이전시 연 480~600만원/ha를 지급하는 '고령농 은퇴직불' 도입
- 月 ^{최대} 110만원 '청년농 지원금' 신규물량 확대로 청년유입(5천명) 촉진
- 논에서 벼 대신 '전략작물 재배농가'에 직불금 확대 지급

	현행('23)	'24년案	기대효과
은퇴직불	-	고령농 농지 매도 600만원/ha 선임대후매도 480만원/ha (126억원)	청년세대로 우량농지 이전
청년농 지원금	신규 4,000명 (551억원)	5,000명 (943억원)	신규 진입 청년농 月 최대 110만원
전략작물	하계 전략작물 100~430만원/ha * 대상면적 : 2.7만ha 밀 재배시 50만원/ha * 대상면적 : 1.2만ha (전략직불 총 1,121억원)	논콩, 가루쌀 100→ 200만원/ha * 대상면적 : 4.5만ha(+1.8만ha) 밀 대상면적 : 2.5만ha (전략직불 총 1,865억원)	쌀 생산량 △9.0만톤 밀 식량자급률 2→ 4% 상향

③ 깨끗하고 쾌적한 농촌 조성

- '탄소중립직불'을 도입하여 탄소 감축 농법에 인센티브 지급
- 농지에 경관작물(유채, 메밀 등) 재배시 지급하는 '경관보전직불' 확대

	현행('23)	'24년案	기대효과
탄소중립 직불	-	탄소저감 농법 직불 지급 *논물관리(경종) 31만원/ha 등 (90억원)	탄소배출량 △7.2만톤 감축
경관보전 직불	15ha (4.5만평) (100억원)	24ha (7.2만평) (170억원)	농촌 경관 개선

17. 수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1.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호우*, 댐 건설 중단('18년) 등의 영향으로 수해 위험 심화

* 최근 50년('73년~'22년) 시간당 강수량 50mm이상 강한 호우 발생일수 75% 증가

2. '24년 지원방향 : 물길 전체에 대한 국가 물 안전관리체계 구축 [5.1 → 6.3조, +24.3%]

- ① (인프라)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고, 댐 신규 건설과 저수지 준설을 대폭 확대(+1.1조원, +23.0%)

- 국가-지방하천 합류구간 및 재해위험 지방하천 정비 지원 확대

	지원내용	'23년	'24년	기대효과
국가하천	국가하천정비 (준설규모)	4,510억원 (3개소, 439천m ³)	6,627억원 (19개소, 1,972천m ³)	준설 확대로 물길 확장
	국가하천유지보수	2,508억	2,614억	
지방하천	국가하천 승격	—	10개소 (103억)	국가·지방하천 이중안전망 구축
	국가-지방하천 합류구간 본격 정비	—	20개소 (47억)	
	재해위험지구 정비	829개 (7,086억)	893개 (8,698억)	
댐	댐 신규 건설 확대	1개	10개 (93억)	댐 건설 확대로 치수 주요 인프라 정비
저수지	저수지 준설 확대	7개소 (30억)	77개소 (430억)	물 저장능력↑ 범람위험↓

- ② (시스템) 전국 주요 하천에 6시간 전 예보가능한 조기경보망과 물길 전체에 시뮬레이션 기반 첨단 수해 예측망 구축(+0.1조, +66.1%)

홍수예보	시 기반 예보망 구축 (홍수특보지점 수)	169억원 (75개소)	844억원 (223개소)	주요 국가·지방하천에 촘촘한 예보
디지털트윈	댐·하천·저수지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54억원	265억원	시뮬레이션으로 수해 위험도 사전 분석

18. 국민 마음을 살피고 보듬겠습니다.

- **[현황]** 연간 정신질환자 증가세*, 범죄자 중 정신질환자 비율 증가세**, 높은 자살률*** 등 정신건강관리 강화 필요성 대두

* 연간 정신질환자 증가 현황(알코올·니코틴 중독 포함): '18 336 → '21 396만명(연평균 증가율 5.7%)

** '14년 0.4% → '17년 0.5% → '20년 0.6% → '21년 0.7% ('21 경찰통계연보)

***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23.6명/10만명, '20년) 정신질환자 비율 39.8%) ('21 경찰청 자살통계)

※ 미국, “정신건강과 약물중독의 동등성 및 형평성에 관한 법률(2009년)” 시행

→ ①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혜택의 수량적 제한 금지

② 신체적 의료서비스와 동등한 수준의 정신건강 의료서비스 제공

- **'24년도 예산(안)** : '23년 550 → '24년 1,282억원(+732억원, 132.9%)

- “예방·조기발견-치료-복귀” 전주기의 연계성 강화 및 투자 대폭 확대
 - 국민의 스트레스·우울·불안에 대한 마음 상담 프로그램 신설('24년 시급한 고·중위험군 8만명, '27년까지 100만명), 안전장비 보급 등 경찰력 강화 추진

	사업명	'23년	'24년	기대효과
예방·조기발견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 상담 서비스	—	고·중위험군 8만명 8만원 × 8회 (539억원)	전국민 대상 일상적 마음 돌봄 추진('27년까지 100만명)
	자살예방 전화 상담	80명(42억원)	100명(48억원)	전화응대를 60→75%
치료·재활	정신응급의료센터	10개소(26억원)	12개소(29억원)	정신질환자 긴급 외상대응 전국화
	정신재활시설 환경개선	39개소(46억원)	48개소(74억원)	입원거부감 완화
홍보	자살예방교육, 광고	10억원	45억원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 및 차별완화
위해대응	기동대 안전장비 보급	—	101개 기동대 (16억원)	공공장소 안전강화 및 신속대응
	광역단위 정신질환자 응급대기소	—	18개소(6억원)	
	저위험 권총	3인 1총기(14억원)	1인 1총기(86억원)	
	위기개입팀	12명 × 17개 권역 (37억원)	18명 × 17개 권역 (47억원)	365일 24시간 위기 상황 대응

19. 초급간부 처우 획기적 개선으로 우수자원 확보

1. 현황 및 문제점

□ '23년 軍 사기진작을 위해 6.9조원(+1.4조, +26.0%) 투자

- (병 봉급)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리적 보상(82 → 130만원, 사회진출지원금 포함, 병장기준)
- (병영환경) 더 좋은 병영식당 확대(3→297개), 2~4인실(기존 9인실) 생활관 신축(52동)
- (간부선발) 단기복무장려금 50% 인상(장교 6→9, 부사관 5→7.5백만원), 4년만에 인상
- (복무여건) 군 관사 기준면적 확대(75→85m² 신규 504세대), 1인 1실 간부숙소(3,371실) 신규 지원 주택수당 27년만에 인상(月 8→16만원)으로 주거여건 현실화

⇒ 여전히 초급간부 지원을* 저조, 합리적 보상 요구도 지속

* 학군장교(ROTC): ('13) 3.5:1 → ('22) 2.4:1 → ('23.上) 1.6:1

2. '24년 지원방향 : 초급간부 주거여건 개선 및 인센티브 확대 (0.8조원 → 1.1조원, +0.3조원)

□ 노후시설을 전량개선하여 녹물관사를 제로화하고 주거시설 보급 확대 및 3년미만 초급간부에 대해서도 주택수당 신규 지원

□ 단기복무장려금은 금년 50% 인상에 이어 '24년에도 최대 300만원을 인상하여 우수자원 확보

	사업 또는 지원내용		'23년	'24년	기대효과
관사 · 간부 숙소	노후시설 전량 개선		1.4만개 (1,999억원)	4.2만개 (4,196억원)	녹물 관사 제로
	주거시설 건립		1.7만개 (4,785억원)	1.9만개 (5,260억원)	주거시설 확대
주택 수당	대상확대 (月 16만원)		3년이상 간부 (2.8만명 529억원)	+ 3년미만 초급간부 (3.2만명 619억원)	초급간부 주거· 경제 여건 개선
장 려 금	지 원 액 인 상	장 교 부사관	900만원 750만원	1,200만원 1,000만원	초급간부 인센티브 확대
	대상확대	장 교	대학재학 중 학사·학군단 (7,058명 587억)	대학졸업 후 학사장교 (7,441명 825억원)	

20. 국격에 걸맞은 ODA 확대로 국익 창출

- **(총량)**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격·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ODA 달성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6.5조원 ODA 투자(4.5 → 6.5조원, +2.0조원)

○ 기존 ODA 예산 확대 목표('30년까지 6.2조원)를 조기 달성

<우리나라의 그간 ODA 투자 추이>



<글로벌 ODA-GDP 순위(OECD, IMF)>

국가명	ODA 순위('22년)	GDP 순위('22년)
미국	1	1
독일	2	4
일본	3	3
영국	5	6
대한민국	16	13

- **(방향)** 우리 기업과 청년의 해외진출, 공급망 등 국익 확보 및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있는 역할 수행 등을 위한 ODA 확대

- ① (해외진출) 수출 新시장 개척 및 청년인재 해외진출을 위해 디지털 디바이드 등 우리 강점분야와 국제기구 지원 확대(+0.6조원)
- ② (전략지역 지원) 공급망, 수출시장 등에서 핵심 협력관계인 인·태지역과 경제교류 수요가 높은 아프리카지역 지원 확대(+0.6조원)
- ③ (우크라이나 지원) 전후 재건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재건사업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우크라이나 지원을 큰 폭 증액(+0.4조원)
- ④ (인도적 지원)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국가로서 재난구호, 식량, 의료 등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기여(+0.4조원)

	'23년 (4.5조원)	'24년 (6.5조원, +2.0)	지원내용
해외 진출	1.7조원	2.3조원(+0.6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디바이드 완화(+0.3조원) ○ 청년 해외진출(0.3→0.4만명)
전략지역 지원	1.4조원	2.0조원(+0.6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태지역(+0.4조원) ○ 아프리카(+0.2조원)
우크라 지원	0.1조원	0.5조원(+0.4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용품, 구호장비(+0.2조원) ○ 재건 지원(+0.1조원)
인도적 지원	0.3조원	0.7조원(+0.4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대응·난민 지원 등 (+0.3조원) ○ 식량원조(+0.1조원)